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활기찬 신동엽은
NK뷰키트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도
문의 : 080-340-2222 www.nkvue.com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519호 1판 (음력 5월 20일)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 일자리 추경 여야 마찰 속타는 광주시·전남도

### 광주, 광주형 일자리 등 10건 145억
### 전남, 일자리 플랫폼 등 33건 1456억
### 청년 구직난 심각…빨리 통과 시켜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관련 정치권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각각 '광주형 일자리'와 '전남형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어 지역 내 고질적인 취업난과 구직난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추경'의 처리 시한을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2일로 잡고 있으나 야당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017년 추경으로 광주는 10건에 145억원, 전남은 33건에 1456억원의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 국고 지원의 핵심은 광주형·전남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이다.

광주시는 고용노동부 예산에 노사상생형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사업비를 포함시켰으며, 이는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연구하는 용역비 성격이다. 광주시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정부예산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 새일센터 지정운영(건의액 2억원), 창업선도대학(2억원), 문화중심도시 조성(1억여원) 등에 국고 지원을 요청했으며, 보건복지(34억여원),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등 전략산업(58억여원) 등에도 국고 지원이 절실하다.

전남은 추경예산의 5분의 1인 280억원을 전남형 일자리 종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자립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복안이다. 기존의 단발성 일자리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역부족인데다 분야별 특화된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책임 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각 분야별 일자리 연계를 통해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청년창업 재도전 프로그램 지원(5억원), 청년 해외취업 양성센터 설립(14억원),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사업(2억4000만원), 사회적경제 S-PLEX 조성 사업(48억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5억원) 등 상당수 추경 건의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과 관련돼 있다.

도서연안 수산양식 로봇센터구축사업(34억원), 무인기(드론)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체계 구축(35억원), 철강소재 부품 개발 및 실증인증 기반구축(15억원), 조선해양산업 구조고도화 센터 구축 운영(15억원), 귀어·귀촌 체험시범단지 조성(16억원), 친환경양식 창업지원(7억원) 등 전남의 기간 및 미래산업과도 연관성이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의 고질적인 청년실업, 일자리 미스매치,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정부부처와 함께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고 건의액과 지방비를 합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에서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일보훈대상 영광의 얼굴들 ▶7면

청년, 청년을 말하다-정소피아 ▶18면

KIA 명품 테이블 세터 이명기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5·18 최후 항전지' 옛 도청 원형 복원

### 광주시 공식화…정부와 협의 나서
### 본관·회의실·별관·상무관 등
### 민주평화교류원 모든 건물 대상
### 문화부 "적극 지원하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전경. 사진 중앙은 복원논란이 제기된 옛 전남도청 본관. 민주평화교류원은 도청 본관·회의실·별관, 경찰청 민원실·본관 등 6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옛 전남도청을 80년 광주항쟁 당시 모습으로 원형 복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6면〉

광주시는 13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대책위)가 발표한 옛 전남도청의 '5월 모습으로 원형복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정한 원형 복원 대상에 포함된 공간은 옛 전남도청 본관·회의실·별관, 상무관, 경찰청 본관·민원실 등 사실상 민주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모든 건물이다.

시가 옛 전남도청에 복원을 두고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대책위가 옛 전남도청에서 농성을 벌인지 280여일만이다. 이들은 "문화전당 건립과정에서 계엄군 총탄 흔적 등 80년 5월 항쟁유적이 훼손됐다"며 원형복원을 촉구해왔다.

광주시의 공식 입장정리는 정부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5·18 37주년 기념사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은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성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도 이날 행사에서 "이번 공청회는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바에 따라 타당하고 적절한 해결 방향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옛 전남도청 복원문제를 적극 지원하겠다. 광주시와 적극 협의해 이른 시일에 민주평화교류원을 정상화해 아시아문화를 바탕으로 광주정신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말께 문화부 장관을 면담하고 복원범위, 복원사업 추진절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면담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8월 말까지 옛 전남도청 보존방안과 원형 복원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위 및 기관·단체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사업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금명간 옛 전남도청 복원·보존 자료조사 및 수집 TF를 구성한다.

하지만, 대책위의 주장대로 민주평화교류원의 모든 건물이 원형복원될 경우 이미 구축된 전시 콘텐츠의 철거가 불가피하고 문화전당의 운용원리를 수정해야 하는 등 난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 된 옛 전남도청은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에 포함된 건물이다. 문화전당 측은 광주항쟁을 예술로 승화한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옛 전남도청 본관·회의실·별관, 상무관, 경찰청 본관·민원실 등 민주평화교류원에 포함된 건물들을 리모델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文, 정면돌파…김상조 임명 강행

〈공정위원장〉

### 미래 유영민·통일 조명균·농림 김영록·여성 정현백 장관 내정

유영민 미래

조명균 통일

김영록 농림

정현백 여성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62) 전 국회의원,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60)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66)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64) 성균관대 교수 등을 각각 내정했다. 〈관련기사·프로필 2면〉

이로써 17개 정부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통상부를 제외한 15개 부처의 장관 내정자가 정해졌다. 15개 부처 장관 가운데 호남 출신은 광주의 김상곤 교육부총리 내정자, 전북 정읍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완도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등 3명이다.

완도 출신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경험과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정무적 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여 농축식품부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박 대변인 설명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부산 출신인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 ICT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여성문제와 양성평등, 노동 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운동가이자 국내외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역사학자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격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돼 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 나섰으나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